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안 번호	1601
----------	------

제출연월일 : 2017. 07.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우리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생활임금 결정 및 적용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가. 「최저임금법」 제8조
나. 「근로기준법」 제2조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라. 「민법」 제32조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6. 예산수반 사항

- 소요경비 : 200,000천원(시비 200,000천원)
- 세부내역 : 비용추계서 참고(덧붙임)

7. 입법예고 결과

- 가. 예고기간 : 2017년 5월 23일 ~ 6월 12일(20일간)
-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가. 규제개혁관련협의 : 해당없음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공정경제과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결정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3.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국비 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공공근로사업 등과 같이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3.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과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생활임금담당국장, 생활임금 담당과장, 예산 담당 부서장, 기간제근로자 총괄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이 100분의 60이 넘지 않도록 한다.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3.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안전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적용시기) ① 제9조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의 적용시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희망경제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희망경제과장 임근혁
	팀장 직위·성명	기업지원팀장 홍윤식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이자랑 (790-5594)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안 제 3조, 제 9조, 제10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하남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 중 생활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 보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생활임금은 2017년 경기도 평균 생활임금 적용 : 7,380원/시간
 - 경기도 평균 생활임금 : 최저임금(6,470원) 대비 114%
 - 2017년 하남시 생활임금 추정액 : 200백만원(8월부터 지급 기준)
 - ※ 연간 소요액 : 479백만원
- 생활임금 상승률은 최저임금 상승률 적용 : 년 7%
 - 최저임금 현황 :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하남시 생활임금 지급	200	512	548	586	627

다. 재원조달방안 : 2017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협의 필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주민지원국 희망경제과장 임근혁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해	당	없	음	
세 출		200,000	512,000	548,000	586,000	627,000	2,473,000
하남시 생활임금 지급		200,000	512,000	548,000	586,000	627,000	2,473,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00,000	512,000	548,000	586,000	627,000	2,473,000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 최저임금법

-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